'國法'에 묶인 '佛法'…개정·폐지 마땅

불교 규제 법령 개정 공청회 개최

"정부는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이중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개발제한구역 유지 · 관리, 타시설과 형평성 등 측면에서 전통사찰 요구사항 전면수용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이영근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가 공동주최한 공청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교구본사주지스님 15명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정치권에서도 이해봉 국회 정각회 회장과 윤원호 열린우리당 이타회 회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장영달 열린우리당 대표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교 규제 법령 개정 공청회' 장면.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전통문화공간 규제 위헌소지

1주제인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돼 있고 관련법제에 의해 제한을 받게 돼 조항들 간의 체계 정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러한 법의 구조는 입법목적에 배치돼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관련조항과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개정도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법에 아예 특례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전통사찰의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이를 위한 사회적 운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형남 변호사는 "전통문화를 창조해나가는 종교적 유기체가 자유롭게 활동해나가야 할 공간을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으로 묶는다는 것은 문화국가원리나 종교의 자유에 비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통사찰을 현재 대지화 돼 있는 부분과 그 밖에 지역을 나눠, 대지화 돼 있는 지역에서는 자율적인 통제하에서 건축불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역에서는 전통사찰이 자연환경보존에 관한 국가법령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규제 풀어라" "어렵다" 공방

공청회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진행된 주제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과 과제.'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개정해 전통사찰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동법 22조(부담금의 감면)을 개정해 전통사찰의 개발훼손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법 시행령 별표3을 개정해 전통사찰 증축 시 토지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 범위)을 개정해 전통사찰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영근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신 · 증축 허용 요구에 대해 "전통사찰 외 일반사찰, 교회 등 2600여개의 종교시설이 있어 전통사찰에 한해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영근 기획관은 △소규모 사찰의 최소증축규모를 일부 확대하고 △현재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증축면적을 개발제한구역관리 대장상 면적으로 인정해 추가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전통사찰 진입로 확보 요구에 대해서도 "전통사찰은 산중에 위치해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훼손면적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도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발훼손 부담금 감면 요구 또한 "훼손부담금은 주민생업시설을 제외하고는 도로 · 철도 등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에 예외 없이 부과하고 있어 전통사찰에 한해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도 종교시설만 완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방식이나 요율 등에 대한 용역조사가 끝나는 10월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오 스님(고양 흥국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종교적 형평성 논란과 관련 "전통사찰은 특정 종교만의 시설이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문화유산"이라며 "관계당국이 불교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전통사찰에 대한 그린벨트 및 공원 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英 그린벨트제 타산지석으로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은 '외국의 그린벨트 제도' 발제에서 "이제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설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이 단순한 개발억제기능 외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개발 토지의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훌륭한 타산지석으로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영환 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은 "그린벨트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익집단과 구역주민, 시민 · 환경단체들이 커다란 관심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제안했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현재의 제도는 국가가 전통사찰의 원형마저 기형으로 만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제도"라고 꼬집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의 문제점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전통사찰과 개발제한구역이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교구본사주지聯 "개정 촉구"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불교 규제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전통사찰은 각종 국가 법령의 규제에 의해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종교 활동마저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사찰 증개축 면적 규제 완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개발훼손 부담금 부과 철폐 △중첩 규제 조항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만 '전국 강원 교직자 연수'를 마치고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에서 '전국 강원(승가대학) 교직자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 참여했던 효탄 스님(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 사진)이 소감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한국 불교의 미래 '교육'에서 찾아야

효탄 스님 (운문사 승가大 강사)

모든 것은 흘러간다. 무상(無常)이다. 때문에 더욱 더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마친 이틀 뒤, 숨도 돌릴 틈 없이 3박 4일의 불광산사-중태선사-법고산사 교육연수를 위해 대만 행 비행기를 탔다.

불광산사의 명성은 익히 들은 바였다. 40여년의 짧은 세월에 이러한 대형 불사를 이룩한 것은 기적에 가까울 지경이다. 그러나 그 답은 "교육이다"라고 도감원장 훼이추안(慧轉)스님은 명확히 말한다.

불광산사의 처음 시작은 '불학원(佛學院, 우리의 전통강원)'에서부터였다. 불학원 교과목 중 눈에 띄는 것은 임제종맥을 잇고 있으나, 조사어록이 '싱윈 대사 어록'으로 대치된 느낌이었다. 이것은 중국 본토를 뒤로 하고 밀려 나온(?) 대만 불교의 특징이겠으나, 한편 같은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큰 선지식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1967년 개창된 불광산사의 사세(寺勢)는 대만 내 70여 곳의 사찰과 라디오, 케이블 TV, 신문을 운영하고 세계 5대양 6대주에 200여 곳의 사찰을 관할하며 불교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40년 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면서도 불교의 사회화 · 국제화에 성공한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들은 불학원 안에 이미 랩(Lab)실을 갖추어 놓고 있으며 10단계의 외국어 교육을 필수로 시키고 있었다. 도서관 시설도 장서와 규모는 물론이고, 학인들을 위해 좌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또한 비구 · 비구니(남녀) 평등, 재가자 · 출가자(승속)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정신이 재가자의 자연스러운 출가를 유도하고 비구 · 비구니 및 출 · 재가의 융화와 존경을 이끌어내고 능력별 평등을 바탕으로 대만불교를 국제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날 중부의 중태선사로 바삐 향했다. 중태선사는 안내자의 말대로 "말이 필요 없고 눈으로 보시라"고 했듯이 불광산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찰이었다. 우리 돈으로 2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여된 36층, 115m, 연건평만도 2만5000평이 넘는 현대식 대형 사찰에 1600명이 수행하고 있었다.

부주지 지엔다(見達) 스님은 중태선사 역시 그 발전의 모태를 "교육-인재불사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간단히 "'창건주인 외이지에(惟覺) 스님의 유지에 따르는 신도들의 순수한 보시에 의한다"고 잘라 말해 우리는 입을 다물기도 하였다.

다음 날 세 번째로 찾은 곳은 북부의 진산(金山) 법고산사였다. 법고산사는 셩옌(聖嚴) 대사의 원력 아래 '세계불교교육단지'를 지향하며 8만평의 부지에 사찰 자체를 대학캠퍼스처럼 꾸며 놓았다.

법고산사는 중화불화연구소와 법고산산 승가대학 안에 불학원, 승려양성반, 선학원이 개원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석 ·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불학원은 4년제이며 출 · 재가자 모두에게 입학이 허용되어 있으며, 입학 1년 후 자연히 출가를 하게 되는 경우는 90% 이상에 이른다 한다.

한마디로 대만 불교의 저력은 '철저한 교육을 통한 융화와 결집력(조직력)'이었다. 찜통더위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대만 불교 교육현장을 들러본 강원교직자 스님들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전통과 현대교육의 조화'라는 화두를 들고 돌아왔다.

북한 핵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한다!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고, 우리는 인질상태가 되어 끌려 다니는 상황이 되었다.
- 2.13 합의는 핵문제 타결의 시작에 불과하며, 북한은 첫 단계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북한 핵의 최대 희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 북한 핵이 폐기되어야만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평화가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이룩 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최상의 수단 이다.
-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전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자주적 안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하므로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 한미연합사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군이 현대화, 정보화 될 때까지 상당기간 존속되어야 한다.

현재 1,000만명 서명운동은 재향군인회와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전국민이 합심하여 추진한 결과 이미 500여 만명이 서명하여 주셨고, 곧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진 본 서명은 미국 정부 및 의회와 차기 한국정부에 제출하여 북 핵 폐기와 연합사 존속에 대하여 한 · 미간 재협상토록 강력한 요구와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 입니다. 국민 여러분 ! "1,000만명 범 국민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켜나갑시다.

참여 회원의 성금이 나라를 지킵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366501-01-078314 (예금주 : 김효은)
신한은행 110-217-526944 (예금주 : 김효은)
농 협 1193-02-013644 (예금주 : 김효은)
우 체 국 104836-01-001461 (예금주 : 김효은)

1,000만명 서명 추진본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9-5 (신한오피스텔 601호)
Tel.02-542-1012 Fax.02-544-0107

공동대표 정래혁(전 국회의장)
김상태 김영관 김현욱 류기남 박세직 박희도
법홍스님 안응모 오영찬 오자복 이명현 이광선
이상훈 이용규 이종구 정기승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TEL.02) 2266-3760 http://nabuco.org

상임대표공동회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공동회장 김철회 김홍래 박일룡 송재운 안병태 이건호 이종구 이희자 정인악 정진태 최기덕 최명준